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3호 안건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

2025. 10. 31

관계부처합동

목 차

I. 공급망안정화기금 개요	1
II. 출범 1년간의 성과 및 한계	2
[참고] 성과평가 설문조사 결과	4
III. 개선방안	7
1. 기금의 적극적 지원 강화	7
2. 기금 효율성 제고	8
3. 법·제도 개선	10
IV. 향후 추진 계획	11

I. 공급망안정화기금 개요

◇ 글로벌 공급차질 요인(코로나 19, 요소수 사태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신설('24.9월)

□ (개요) 공급망안정화법 제38조('24.6월 제정)에 근거, 공급망 안정화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에 별도의 정책금융 설치('24.9월)

○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국회 동의 의결)을 발행하여 재원 조성

* 기금채권에 대한 정부 채무보증 규모 : '24년 5조원, '25년 10조원

○ ①안정화 선도사업자 및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급망 기금운용심의회,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지원

- 공급망안정화법 취지 등을 감안하여 경제안보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4대부문* 중점 지원

* 4대부문 12대분야 : ①첨단전략(이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②자원안보(핵심광물, 에너지), ③경제필수재(식량, 산업원료, 기계장비), ④물류·인프라(운송, 비축, 항만)

□ (그간의 노력) 기금 정착을 위한 기반마련·제도개선 추진

○ 공급망기금 시행 초기 단계에서 드러난 운영상 과제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운영의 기틀을 마련

-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법 개정(공급망법 개정, 9.30일 기재위 의결), 중장기 사업 지원 위한 대출·투자기간 연장(10년→20년) 등 추진

- 국산 소재부품 수요 견인을 위한 국산품 구매 지원, 공급망 핵심분야 등에 대해 최대 국고채 수준으로 금리 지원 강화

○ 기존 경제안보품목 중심 지원에서 서비스까지 지원영역을 확장하고, 선도사업자를 추가선정* 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

* 선도사업자 선정 내역(누적) : ('24) 99개사 ('25.上) 138개사

- 경제안보품목 관련 비선도사업자의 경우에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에서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극 지원

II. 출범 1년간의 성과 및 한계

- (지원 현황) 기금 출범 이후 누적 6.5조원 지원('25.9월 기준)
 - 공급망기금 규모(국가보증 한도)를 '24년 5조원에서 '25년 10조원으로 확대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대폭 강화
 - 기금 초기이며,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 상황이었으나, 6.5조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뒷받침
 - 대기업 지원(29건)과 중소·중견기업 지원(35건)을 병행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균형있게 추진
 - 대출 중심의 지원에서 나아가 투자지원도 개시하는 등 기금 운용방식을 다각화(펀드 조성*, 프로젝트 펀드 투자 등)
 - * 공급망안정화에 기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공급망안정화펀드 조성 (공급망기금 1,000억원, 수은 1,000억원 등 참여, 총 1.8조원 규모)

- (지원 성과) ①국내 공급망 생태계 유지, ②해외자원 확보, ③금융 사각지대 지원 등을 통해 국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

① 국내 공급망 생태계 유지 및 산업 기반 강화

- 이차전지 등 핵심산업의 국산 부품·소재 수요를 견인하기 위해 국산 부품·소재 구매기업에 저리의 정책금융 지원
- 산업의 안정적 생산망 확보를 위해 원재료 조달부터 완제품 구매에 이르는 공급망 전주기 연계 금융 지원*

* 부품 제작업체(A기업)의 원재료 구매 지원 → B기업 최종재 구매 지원

- 경제안보품목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비용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능력 확충을 유도

② 해외자원 확보 및 수입다변화 추진

-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광산개발, 자원확보 기반 마련 등을 위한 투자자금 지원
- 첨단산업 등의 원재료 구매 및 특정국가 의존도 완화를 위한 수입처 다변화 지원

③ 금융 사각지대까지 포용하는 촘촘한 지원 실행

- 기존 상업 금융기관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저신용기업 등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자체 신용평가 등을 통해 기금지원
- 자원 재활용, 식량, 필수 산업원료 등의 안정적 확보 지원

□ (한계) 출범 초기단계로서 우선순위 설정 등 전략적 접근이 미흡하고, 대출 중심의 소극적 운용에 머문 측면

○ 대외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하였으며, 대출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

* 수단별 지원 건수(25.9월 누적 기준) : (전체) 66건, (대출) 64건, (투자) 2건

⇒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 고려시 투자 확대, 해외와의 연계 강화 등 추진

○ 산업별 중요도나 공급망 파급효과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 부족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 제기

* 규모별 실적(25.9월 누적 기준) : (대기업) 55,041억원/ 29건, (중소·중견) 9,044억원/ 35건

○ 기타 정책금융과의 중복 가능성 및 시너지 효과 저조 지적

[참고] 성과평가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 (조사대상) 기금 출범 1년간('24.9월~'25.8월) 지원기업 49개사
- (조사시기) '25. 9. 29. - '25. 10. 14.
- (수행기관)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조사내용) 기금 신청·심의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및 기금 지원의 공급망 안정화 효과 여부 등

2. 전반적인 만족도

(1) 기금지원 전반적 만족도

- 기금지원 전반적 만족도는 높은 편이며(9.59점/10점), 승인액*·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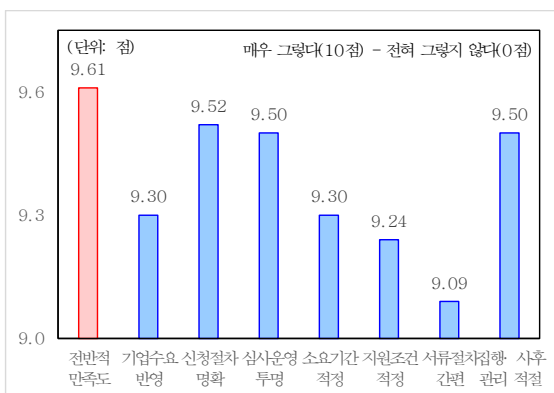
* 승인액별 만족도 : (~200억원) 9.73 (200~500억원) 9.62 (500억원~) 9.50

** 기업규모별 만족도 : (중소기업) 9.70 (중견기업) 9.69 (대기업) 9.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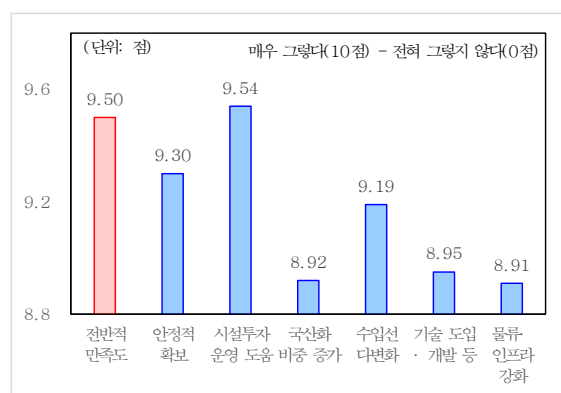
(2) 각 항목별 만족도

- 기금 지원의 신청·심의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남(9.61점/10점)
- 전반적인 공급망 안정화 효과 체감 정도는 높음(9.50점/10점)
 - 중장기적 과제인 국산화 비중 증가, 기술 도입·개발 및 물류·인프라 강화 효과에 대한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저조

< 기금 신청심의 절차에 대한 만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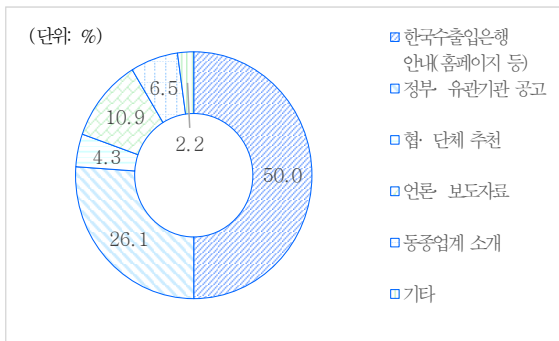
< 기금지원의 공급망 안정화 효과 체감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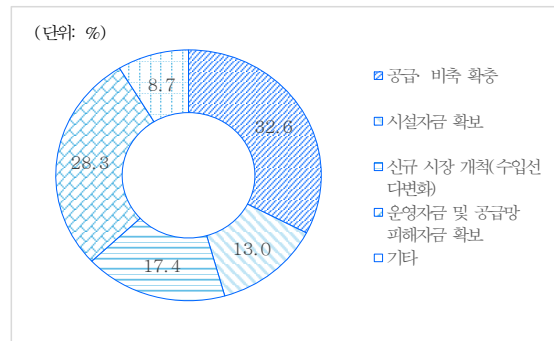
3. 최초 인지 경로 및 지원사업 참여 사유

- 대부분 홈페이지 등 한국수출입은행 안내(50.0%) 또는 정부·유관기관 공고(26.1%)를 통해 기금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응답
- 또한, 공급·비축 확충(32.6%), 운영자금 및 공급망 피해자금 확보(28.3%)를 위해 기금 지원을 요청하였다는 응답이 많았음

< 공급망기금 최초 인지 경로 >



< 공급망기금 지원사업 참여 사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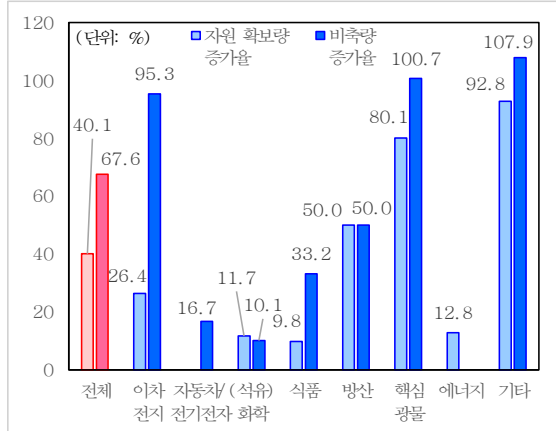
4. 자원확보·비축 증대

- 공급망기금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자원확보량은 평균 40.1%, 비축량은 평균 67.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이차전지, 핵심광물 등 분야에서 자원확보 및 비축량 증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신규 자원 확보 및 비축 실시 현황 >

단위: %	자원 확보		비축	
	신규 ¹⁾	증가율 ²⁾	신규 ¹⁾	증가율 ²⁾
전체	8.9	40.1	7.3	67.6
이차전지	22.2	26.4	12.5	95.3
핵심광물	12.5	80.1	12.5	100.7
그 외	3.6	35.0	4.0	51.9

< 분야별 자원확보 및 비축 증가율²⁾ >



1) 신규로 자원확보, 비축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

2) 기업 자원확보량, 비축량의 평균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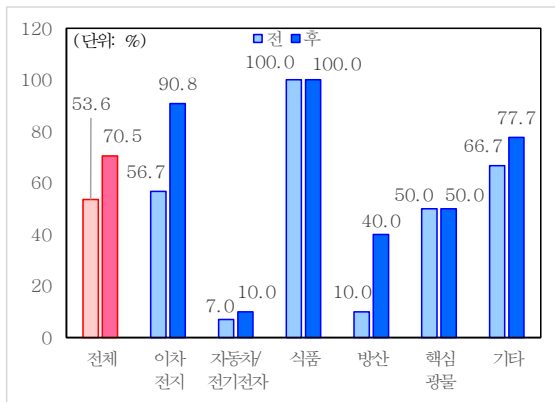
5. 생산능력 확대

- 응답기업 중 기금 지원 후 신규 생산하게 된 기업(7.7%)도 있으며, 응답자들의 생산능력은 지원이전과 비교해 50.4% 증가
- 국내생산 비중은 평균 16.9%p 증가한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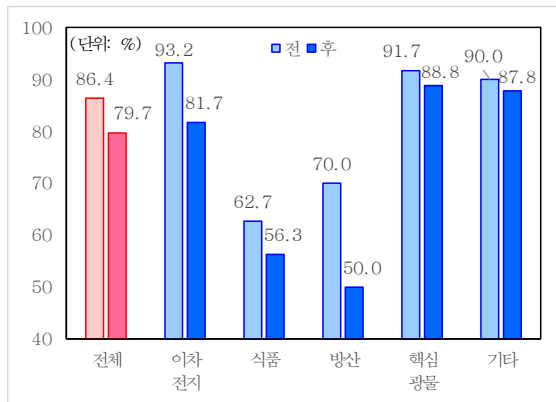
6. 수입 다변화

- 응답기업의 30.6%(¹개국22.2% + ²개국8.3%)는 수입국이 증가하였으며, 8.3%는 기존 수입국을 제3국으로 대체
- 특정국 의존도는 평균 6.7%p 하락한 것으로 조사

< 기금 前後 국내 생산 비중 변화 >



< 기금 前後 특정국 의존도 변화 >



7. 개선 필요사항

- 제한적인 기금 지원대상 및 기금에 대한 홍보부족 등을 지적
 - 중소기업의 경우 40%가 재무 위주의 심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

< 공급망 기금 필요사항 >

(단위: %)

	제한적인 지원대상	기금 홍보 부족	복잡한 신청 절차	재무상태 위주 심사	지원조건 개선 필요	기타
전체	23.9	21.7	2.2	13.0	17.4	21.7
중소기업	20.0	10.0	10.0	40.0	20.0	0.0
중견기업	23.1	30.8	0.0	0.0	15.4	30.8
대기업	26.1	21.7	0.0	8.7	17.4	26.1

Ⅲ. 개선방안

1 기금의 적극적 지원 강화

① 직·간접 투자 활성화

- (현황) 中 수출규제 강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으로, 공공의 적극적인 투자 및 방파제 역할이 긴급
- (개선방안) ① 1,000억원 규모의 직·간접 투자 및 ② 핵심광물·에너지 부문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 조성 추진
 - 리스크가 높은 해외 자원개발, 운송 인프라 등 분야에 연간 1,000억원 규모로 투자하여 투자 마중물 역할 수행
 - * 투자 리스크 감내 위한 자원 확보(26년 정부안 100억원 반영) → 1,000억원 특별투자한도 조성
 - 공급망기금, 공공·민간 공동투자를 통해 2,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

②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 (현황)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이 미비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필요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음
 - 특히 공급망기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은 재무제표 중심의 심사체계를 공급망기금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
 - * 기금 수혜기업 설문 中 중소기업의 기금 문제점 인식 : (재무위주 심사)40% (지원대상 제한)20% (지원조건 미흡)20% (홍보 부족)10% (절차 복잡)10%
- (개선방안) 低신용 등으로 여신 한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 대출한도 프로그램 마련
 - 기존 재무평가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제한되던 기업에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한도와 완화된 조건을 적용

③ 해외 연계 강화

- (현황) 원자재 수급을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급망 안정성 제고 위해선 글로벌 사우스 등과의 협력 필수적
 - 특히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리스크 분담,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한 국제기구나 주요국 금융기관 등과의 협조 필요
- (개선방안) 국제기구, 주요국 금융기관 등과의 국제협력 본격화
 - 아세안 현지 핵심광물 개발, 정·제련 등의 유망사업 공동 지원을 위해 한-아세안금융협력센터와 MOU 체결 추진
 - 호주, 캐나다 등 해외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리스크를 분담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

2 기금 효율성 제고

① 기금 지원 우선순위 설정

- (현황) 초기 단계 기금은 경제안보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공급망 영향도(품목등급)에 대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지원
 - 경제안보품목 등급별 차등지원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
- (개선방안) 공급망 중요도 및 안정화 기여도에 따른 차등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한도 및 우대금리를 차등 적용
 - (1등급 품목) 공급망 중요성이 매우 높은 품목임을 감안, 최우대금리 제공 및 최대 대출한도 적용*을 통해 최우선 지원
 - * 비선도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소요자금의 90% → 100%로 상향 적용
 - (2등급 품목) 우대금리 적용을 통해 우선 지원
 - (3등급 품목) 선도사업자 중심으로 지원하며 낮은 우대금리 적용

기금 지원 우선순위(예시)

구 분	우대사항	금리우대
1등급 품목	최우대금리 적용 + 최대 대출한도 적용(비선도사업자)	최대 2.3%p 수준
2등급 품목	우대금리 적용	최대 2.0%p 수준
3등급 품목	낮은 우대금리 적용 (선도사업자 중심 지원)	최대 1.7%p 수준

* 단, 금융수요, 개별사업의 특성, 공급망 현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② 기타 정책금융과의 협조 강화

- (현황) 공급망기금은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서 기타 정책금융과 일부 중복 가능

* 공급망법 제38조 제2항(지원대상) : ①경제안보품목등의 확보·도입·공급, ②공급망 안정화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③기술의 도입·개발·상용화, ④피해기업 긴급 지원

- (개선방안) 비효율적 중복지원은 원천 차단하며, 대규모 사업 공동지원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추진

- 유사 정책금융 지원내역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복 수혜 방지 방안을 검토·마련하여 중복 수혜 가능성 차단

- 업무조율 협의체^{수은·산은}를 구성하여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너지 창출을 위해 후속사업 연계, 협력기업 추천 등 추진

* (예시) 공급망기금 : 배터리 기업(A)의 핵심광물 해외 제련 시설 구축
→ 기타 정책금융 : 배터리 기업(A)의 완성품 생산 공장 구축

3] 홍보 강화

- (현황) 공급망기금이 조성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충분히 확산되지 않은 상황
 - 기금 수혜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금에 대한 홍보·인지도 부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
 - * 기금 수혜기업 설문 중 기금 문제점 인식(%) : (지원대상 제한)23.9 (홍보 부족)21.7 (지원조건 미흡)17.4 (재무위주 심사)13.0 (절차 복잡)2.2 (기타)21.7
- (개선방안) 공급망기업의 기금 활용도 제고와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간담회, 세미나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기금 활성화 위한 전문가 및 기업 간담회('25.11월) 등을 개최하여 기금 홍보 및 개선방안 도출
 - '공급망 금융통합 데스크'를 활성화하고, 지원제도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공급망 정책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3 법·제도 개선

- (현황) 기금 초기 운영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 도출
- (개선방안) 적극적 운용 지원, 투자 제약 해소 위한 법 개정 추진
 - 기금의 적극적 운용 뒷받침 위해 수은의 공급망기금에 대한 출연 허용, 고의·중과실 없는 업무에 대한 면책규정 등 도입
 - * 공급망법·수은법 개정 추진 중(기재위 의결, 9.30일)
 - 벤처·신기술 투자조합 등으로 간접투자대상을 확대하여 중소·벤처 공급망 기업의 성장을 촉진
 - * (현행) 집합투자기구(금투법)에 투자 허용 → (개정안)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추가
 - 민간의 공급망기금에 대한 출연을 허용하여 출연법인의 자금을 중소·중견 협력업체 지원 재원으로 활용
 - * 기금 자원 : (현행) 공급망기금채, 정부 등 차입금 → (개정안) 현행 + 정부 외의 자

IV. 향후 추진 계획

정책과제	일정
1. 기금의 적극적 지원 강화	
① 직·간접 투자 활성화	
- '26년 연간 1,000억원 규모 투자 추진	'26년 연중
- 핵심광물·에너지 분야 펀드 조성	'26년 연중
②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별 대출한도 프로그램 마련	'25. 4분기
③ 해외 연계 강화	
- 공급망기금 - 한·아세안금융협력센터 MOU 체결	'25. 4분기
- 해외 금융기관과의 공동사업 추진	'26년 연중
2. 기금 효율성 제고	
① 기금 지원 우선순위 설정	
- 공급망 중요도에 따른 차등형 지원체계 구축	'26. 상반기
② 기타 정책금융과의 협조 강화	
- 유사 정책금융 지원내역 공유체계 마련	'26년 연중
- 수은-산은간 업무조율 협의체 구성	'25. 4분기
③ 홍보 강화	
- 전문가·기업 간담회 개최	'25. 4분기
- 공급망 금융 지원제도 안내책자 발간	'25. 4분기
3. 법·제도 개선	
- 수은의 공급망기금 출연 허용, 면책규정 도입	'25. 4분기
- 간접투자대상 확대	'26. 상반기
- 민간의 공급망기금 출연 허용	'26. 상반기